



주간 통일정세

2013-0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생일 앞두고 전국 어린이에 사탕 선물(1/7,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생일(1.8)을 앞두고 전국의 초등학교·유치원·탁아소 어린이에게 사탕과자 선물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전함.
 - 방송은 7일 "전국의 소학교(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들이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받아 안았다"며 "(김 제1위원장은) 친 아버지의 다심(세심)한 정으로 좋은 것이 생기면 후대들에게 선참으로(먼저) 안겨주시고,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 듯 이번에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당과류(사탕과자)들을 보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사탕과자를 선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생일 2~3일 전에 전국의 소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는 선물 전달식을 열고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알사탕, 과자, 캐러멜, 콩사탕, 껌 등이 든 무게가 1kg 정도의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줌.

- **北매체 "民心은 천하지대본" 선전...민생 행보 주목(1/11, 노동신문; 우리 민족강당)**
 - 북한 매체가 그동안 대내 정치와 관련해 자주 내세우지 않았던 '民心(民心)'이라는 표현을 최근 잇달아 쓰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1면에 게재한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최후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심을 잘 알고 광범한 균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며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이며 인민의 이익과 목소리는 우리 당 정책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주장했음.
 - 이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숭고한 인민관을 철저히 구현해 인민의 이익으로부터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해나가야 한다"며 "몸이 부서져도 인민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기관차,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자기 한 몸을 아낌없이 내대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김일성방송대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강당'은 이날 논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에서 "예로부터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며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고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며, 그러면서 "정치 본연의 사명은 사회의 주인,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해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부연했음.

● **北,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 분위기 조성(1/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번째 생일(2월16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북한이 서서히 생일맞이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의 탄생일인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재중 조선인총연합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9일 결성됐다고 준비위원장으로 최은복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이 선출됐다고 보도했음.
- 이어 "광명성절에 즈음해 준비위는 보고대회, 영화감상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이 김 위원장 생일을 한 달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생일맞이 분위기 조성에 나섬에 따라 올해도 역시 '광명성절'에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총정치국장),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소 개건정형 현지요해(1.9, 중통)
- 강석주(내각부총리), 1.10 中 정부 경제무역대표단(단장 : 리금조 상무부 부부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및 김정은 黨 제1비서 선물 접수(1.10, 중통)
- 畵民은 '김정은의 신년사 구호(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따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1.13, 노동신문/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나. 군사

● **北, 남북간 로켓기술 '격차' 노골적 부각(1/11, 노동신문)**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한 달(12일)을 앞두고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문제를 거론하며 남북 간 로켓기술 '격차'를 노골적으로 부각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높은 경지에 이른 우주 기술-남녘 인민들의 반향이라는 글에서 "광명성 3호' 2호기가 극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남조선 각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남조선 각계는 '북의 로켓기술 수준이 남쪽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이 은하 3호 발사로 입증됐다'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우주기술 위력을 찬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특히 "남조선의 인터넷 가입자들은 '다른 나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이전을 못 받고 발사도 못 하는 나로호를 북에 의뢰했다면 옛날에 발사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美과학자 "北로켓, 탄도미사일로 단정 못해"(1/12, 미국의소리(VOA) 방송)**

- 북한이 작년 말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탄도미사일 개발용 발사체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미국 로켓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고 전함.
- 과학자 단체인 '참여과학자연대(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해군에 의해 인양된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 잔해에서 적연질산(RFNA)이 발견됐고 로켓 연료로 등유가 사용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모두 1950년대 스킵드 미사일에 사용된 '구식연료'라고 지적했음.
- 또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의 로켓이 선진적인 기술이 아닌 옛 소련이 아주 오래전 개발한 초기의 로켓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며 북한이 또다시 로켓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상온에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적연질산을 로켓 산화제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로켓 발사가 위성발사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음.

다. 사회·문화

● **北 "효율성 뛰어난 신형 축전지 개발"(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전기자동차의 전력공급장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의 '연(鉛·납)축전지'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최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밀폐형 연축전지(동력용)가 개발됐다"며 "고체 전해질에 의한 밀폐형 연축전지는 류산(황산) 전해액을 이용하는 연축전지에 비해 30%의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제작원가는 10% 낮고 수명은 2배나 길다"고 전함.
- 또한, 통신은 "지난 10여 년 동안 승용차 시험운행에 적용해본 결과 운행시간은 8시간, 평균 시속은 70km/h, 최대속도는 180km/h를 확보했다"며 "여러 차례 시험에서 서로 다른 운전기재의 내연기관을 능가하는 특출한 기술적 성능을 과시한 신비한 축전지"라고 강조함.

● **北김책공대 교수 "인터넷 확산은 시간문제"(1/8, AP통신)**

- 북한의 IT(정보기술) 전문가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가 북한 내 인터넷 사용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을 방문 중인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일행이 8일 북한 최고 명문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평양발 기사로 전하면서 김책공대 류순렬 전자도서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류 관장은 대학 내에서 교사



들과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은 뒤 온라인에서 검색하려는 자료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힘.

- 류 관장은 그러나 "우리는 곧 인터넷에 접속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터넷 확산은 단지 시간 문제이며 "현재 북한은 모든 교실과 직장에서 컴퓨터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北, 11년 연속 기독교 박해 세계 1위(1/9, 오픈도어스; 연합뉴스)**

- 북한이 전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평가됐다고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미국의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8일(현지시간) 공개한 '2013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평가된 50개 국가 가운데 북한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북한은 오픈도어스가 발표하는 종교박해국 리스트에서 11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으며, 기독교 박해 정도를 점수로 환산할 때 북한은 100점 만점에 87점을 기록해, 2위 박해국인 사우디아라비아(75점)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공산국가 가운데 하나인 북한은 어떤 종류의 종교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은 체포, 구금, 고문을 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15호 정치범 수용소에는 6천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구금돼 있다"고 비판함. 아울러 "중국으로 탈출해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강제 송환당한 북한 주민들은 수감, 처형 등의 위협에 빠진다"면서 "또 탈북자를 돕는 기독교인들은 살해 당하기도 한다"고 주장함.

● **네덜란드 대학, 北서 이달 2차 감자 연구지원 시작(1/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농업과학 연구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바게닝겐 대학이 북한에서 새로운 감자 연구 지원 사업을 이달 시작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함.
- 이 대학의 대북사업 책임자인 마텐 용스마 박사는 지난해까지 1차 지원을 했고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이번 연구 지원은 2차 '감자질병 통합관리'(Integrated Potato Disease Management, IPM) 지원 사업이라고 밝힘.
- 용스마 박사는 "유럽연합(EU)과 네덜란드 정부의 공동 지원금으로 북한의 풍토에 맞고 병충해에 강한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해 EU 집행위원회 산하 유럽원조협력청(EuropeAid)과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가 45만 유로(약 6억2천500만원)를 지원해 북한 농업과학원과의 공동 연구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 그는 2차 연구지원 사업에는 바게닝겐 대학 연구원이 북한을 방문해 새로운 감자 품종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사업과 북한의 농업



분야 관리나 학자의 외국연수가 포함된다고 전했으며, 이러한 북한과의 공동연구 목적에 대해 북한이 외국의 새로운 농업 과학기술을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에 접목해 스스로 식량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밝힘.

● **北 리성근 전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 사망(1/10, 노동신문)**

- 북한 여자축구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리성근 전 감독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신문은 이날 '여자축구 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참된 애국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리 전 감독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리성근 동무는 나라의 여자축구 발전과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헌신의 길에서 높은 실적을 쌓은 관록 있는 책임감독과 축구 전문가"라고 평가함.
- 신문에 따르면 고혈압을 앓고 있던 리 전 감독은 지난해 9월22일 어린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던 중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고 나서 숨김.

● **아일랜드 NGO, 160만弗 규모 北환경개선 사업(1/1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아일랜드 비정부기구(NGO)인 '킨선 월드와이드'가 올해 북한 평안북도와 황해북도에서 식량과 식수,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음.
- 이 단체의 미레일 디쿠마젠지 북한·남수단 지원 담당관은 최근 RFA 측에 "약 160만 달러(16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식량안보와 건강, 식수 지원 등 5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음.
- 5개 지원사업은 ▲금천군 식수와 환경개선 ▲신계군 영양지원 ▲신계군·화창군 공동체 기반 영양지원 ▲금천군 종합영양지원 ▲환경보존을 위한 농업기술지원 사업 등임.

● **北, 중국서 매년 CCTV 수만 대씩 사간 까닭은(1/13,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매년 수만 대의 폐쇄회로TV(CCTV)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탈북자 감시강화 조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연합뉴스가 13일 중국 관세 당국이 집계하는 북-중간 무역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해 1~11월 총 1만6천420대의 CCTV를 중국에서 수입했으며,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166만 달러(17억5천만 원) 규모임.
- 북한은 2009~2011년에도 매년 수만 대씩의 감시장비를 중국에서 수입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만2천987대(245만 달러·25억8천만원)와 2만2천118대(212만 달러·22억3천만 원)를 사들였음.
- 특히 2009년에는 총 4만465대(414만 달러·43억7천만 원)의 CCTV를 수입해 최근 4년만 놓고 보면 수입량이 가장 많았음.
- 북한이 매년 수만 대의 CCTV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군이나 행정 당국의 일반적인 경비업무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근년 들



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탈북자 감시강화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北 평양과기대 나선캠퍼스 생긴다(1/13, 연합뉴스)

- 남북 간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중국과 인접한 경제특구인 나선시에 분교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선에 분교를 건립하기로 북한과 계약을 끝낸 뒤 오는 3월 수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일단 나선시에 있는 기존 북한의 교육시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 분교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평양과기대는 중국의 조선족 출신 교수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적을 가진 전문가로 분교의 교수진을 구성할 계획이며 아직 분교의 학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북한은 1년여 전부터 평양과기대에 나선 분교를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평양과기대와 북측은 지난해 11월께 분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평양시 락랑구에 있는 평양과기대 본교가 북한의 첨단 정보통신(IT)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유명하다면 분교는 경제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 北, 올해 첫 '체육의 날' 맞아 다양한 체육 활동(1/13, 조선중앙TV)

- 북한은 13일 올해 첫 '체육의 날'을 맞아 평양시를 비롯한 전역에서 다채로운 집단체육 활동을 벌였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음.
- 조선중앙TV는 이날 "당의 체육강국 건설구상을 빛나게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올해 첫 체육의 날을 맞이한 수도 평양은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흥성이었다"고 전했다.
- 체육성 김장산 부상은 "성, 중앙기관 정무원(공무원)들의 집단달리기, 대중운동체조, 건강태권도를 하면서 새해 첫 체육의 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 북한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월 두 번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제정해 집단 체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노동당 출판사, 신년사 과업 관철으로 부르는 선전화들 출판 (1.10,중통·중방)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中 제7차 경제무역 협조위원회 평양서 개최(1/7, 조선중앙통신)**
 - 리진짜오(李金早)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경제무역대표단이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이번 회의의 안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황금평·위화도와 나진 특구를 개발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두만강교 도보 건너 北관광 서양인도 가능(1/8, 자유아시아방송(RFA))**
 - 서양인 관광객이 중국 지린성 투먼(圖們)시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를 잇는 다리를 걸어서 건너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 상품이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이 관광상품을 개발한 '영파이어니어 투어스'의 트로이 콜린스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서양인 최초로 지난해 11월께 해당 관광코스를 답사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관광상품 개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투먼~남양 다리를 건너 북한 함경북도 지역을 돌아보는 관광상품은 과거에는 중국인에게만 허용됐지만 서양인에게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서양인 관광객들은 중국 투먼에서 북한 남양까지 도보로 다리를 건너 다음 승합차를 타고 함경북도 회령시, 청진시, 칠보산 등을 방문하게 되며, 북한에서 옛새 동안 지내는 이 관광상품의 비용은 990유로(약 137만 원) 정도임.
 - 올해 4월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관광 상품은 호응이 좋아 첫 상품은 이미 예약이 끝났고 네덜란드인, 호주인, 영국인, 미국인 등 서양인들이 관광 신청을 했다고 콜린스 대표가 밝힘.

- **北 건설 앙코르와트 박물관 4월 개장(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옆에 짓는 박물관이 올 4월 개장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앙코르 고고학 공원' 입구에 들어선 이 박물관은 북한의 만수대창작사 해외사업부가 시공을 맡았고 1천만 달러의 공사비 전액을 북한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물관에는 북한 화가들이 직접 제작한 길이 120m, 높이 13m의 초대형 파노라마 모자이크 그림과 부처의 대형 초상화 등이 전시되고 앙코르와트의 조성 과정을 담은 3D 영화도 상영될 예정임.
 - 방송은 캄보디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선대 양국 지도자 사이의 우정을 유지하려는 북한 현 지도부의 의지가 박물관을 건립해 캄보디아에 기증하려는 배경이라고 설명함.



- **中, 北에 전문가 70명 파견 경제특구 '컨설팅'(1/9,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전문 인력 70여 명을 보내 나진, 황금평·위화도 공동 경제특구에 대한 '합작 컨설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중국내 유력한 대북 소식통은 9일 "지린(吉林)성 정부 산하 상무청 직원 70여 명이 수개월째 북한에 파견돼 중·북 합작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또한 "크게는 경제특구의 운영 형태에서부터 특구 관련 각종 법 제도, 외국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30여 년 개혁개방의 중국 비법을 전수 중"이라고 덧붙임.
 - 북한에 파견된 중국 공무원들은 나진, 황금평·위화도 부근의 신의주, 평양 등지를 오가며 구체적인 경제특구 운용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 **北, 세계 38곳 무역대표처 운영(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해외에 38개의 무역대표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방송은 코트라가 최근 낸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현재 중국 6개 도시, 러시아 4개 도시,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인도 등에 해외경제무역대표처를 설립했다"고 전했으며, 이어 "북한이 최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독일의 경제·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새로 설치된 무역대표처가 투자유치뿐 아니라 경제정책 자문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평가함.

- **北中, 경제기술협조 협정 조인(1/9,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9일 평양에서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갖고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그러나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양측은 또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구 관리위원회 사무청사 건설과 관련한 문건도 조인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날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는 구본태 무역성 부상, 리철석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진짜오(李金阜)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경제무역대표단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가함.

- **슈미트 일행, 평양 컴퓨터센터인민대학습당 방문(종합)(1/9, 연합뉴스; AP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9일 평양 중심가에 있는 인민대학습당과 조선컴퓨터센터 등을 찾았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슈미트 회장은 조선컴퓨터센터에서 북한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자체 개



발한 운영체제인 '붉은별과 이를 탑재한 북한산 태블릿PC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던졌으며, 3-D안경을 잠시 착용하기도 함.

- 이 컴퓨터센터는 북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 산업의 중심지로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이제는 과학과 기술을 위한 시대. 컴퓨터의 시대"라고 말한 글귀가 적혀 있었으며, 앞서 이들은 평양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함.
-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 측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 및 간접협의로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정당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으며, 또 "북한 주민이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을 더 활발하게 사용하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 정부관리와 과학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힘.

● 중국 단둥, 올해 대북 경제협력 강화(1/10, 단둥신문망)

- 중국의 대북 교역 최대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시가 올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현지 인터넷 매체인 단둥신문망이 10일 보도함.
- 매체는 단둥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송치(宋琦)를 인용해 북한이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 2년 사이에 경제 발전 측면에서 매우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단둥이 이런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함.
- 단둥시는 중국 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단둥에서 개최한 양국 간 첫 종합박람회인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를 북한과 번갈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유엔, 北로켓 추가제재 논의 지지부진(1/10, 연합뉴스)

- 지난달 12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논의가 미국과 중국 간 물밑 협상에도 아직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이 1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소식통은 이날 일본과 다른 당사국이 대북 조치 협의의 진척을 바라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 제재 확대를 꺼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에 압박을 가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전함.

● 유엔, 北 탄소배출권 시설물 승인 완료(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유엔에 신청한 탄소배출권 시설물 승인이 지난해 말 완료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북한의 탄소배출권 신청을 대신한 체코의 전력회사 토픽 에너지 사의 한 고위 인사는 RFA에 "북한이 신청한 2개 시설물의 타당성 확인 절차가 작년 말에 끝났다"며 이로써 북한이 신청한 시설물 6개의 승인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힘.
-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승인받은 시설물은 예성강 수력발전소 3·4·5



호, 함흥 1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2호 발전소 등 수력발전소 6곳이며, 북한은 현재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가 모두 완공되면 6개 수력발전소를 통해 연간 20만t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음.

● 무산철광 인근 中 난핑-허룽 철도 개통(1/11, 연변일보)

-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북한 무산철광과 인접한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난핑(南平)진과 허룽(和龍)시를 잇는 총연장 42.5km의 철도가 정식 개통했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1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이 철도는 2009년 8월 착공한지 3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완공돼 철도 당국의 검수를 받았으며 허룽에서 중국 동북의 내륙 철도망과 연결됨. 난핑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 무산과 마주해 있는 도시로, 추정 매장량이 45억t에 달하는 무산철광의 철광석이 중국으로 반입되는 주요 통로임.
- 중국은 이번 철도 개통으로 무산광산에서 채취한 철광석을 트럭으로 난핑까지 옮긴 뒤 난핑에서 철도를 이용해 중국 각 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으며, 난핑-허룽 철도 공사에는 11억9천600만위안(약 2천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평안북도 동림군 中 관광객에 개방(1/11, 중국신문사)

- 중국인 사이에 북한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는 7월부터 평안북도 동림군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1일 보도함.
- 통신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라오닝성 단둥(丹東)시의 관광국이 기존에 운영 중인 단둥-신의주 1일 관광에 이어 단둥-동림 1박 2일 관광코스를 개척했다고 전했으며, 동림군은 북·중 접경인 신의주시에서 동남쪽으로 40km가량 떨어져 있음.

● 조선신보 "아베, 납북자 문제로 재일동포 압박"(1/11,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재일동포 사회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신보는 이날 '앞길이 캄캄한 아베 정권의 출범'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아베 정부가 북한문제와 관련해 "특히 납치문제를 걸어 압력을 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벌써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총련조직과 재일동포에 대한 노골적 탄압과 차별정책이 추진될 것이 예측된다"고 우려했음.
- 이 신문은 이어 아베 정부와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헌법을 개정하고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해 사죄한 무리야마 담화 및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도 "제 무덤을 파는 이 정권의 비참한 종언을 벌써 엿보는 것만 같다"고 비난했음.



- 슈미트 방북, 북한 이롭게 할 것(1/11, 뉴욕타임스; 노동신문)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일행의 북한 방문이 북한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음.
 - 타임스는 인터넷을 '폭군의 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슈미트 회장이 빌 리처드슨 전 멕시코 주지사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경찰국가 중 한 곳인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대학습당, 조선컴퓨터센터 등의 첨단시설을 방문했고 북한은 이런 장면을 담은 사진을 배포했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폐쇄적인 국가로 유명한 북한이 이들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보다 체제 선전에 효율적인 도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NYT는 슈미트 회장 등의 '돈키호테식' 방북이 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끝난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극히 '순진한(naive) 방문이었다고 혹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레그 前 주한 美대사 "슈미트 방북은 박수받을 일"(1/13, 뉴욕타임스(NYT))

 -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일행의 방북에 대해 박수받을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함.
 - 그레그 전 대사는 뉴욕타임스(NYT)의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한' 코너에서 슈미트 회장 방북이 북한 체제 선전에 도움이 된다는 지난 11일자 보도를 반박했음.
 - 그는 "김정은은 북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고 구글이 대표하는 정보 흐름의 증가가 그런 변화에 유효유가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본, 북한 도항·송금 제한 강화 검토(1/13, 아사히신문)

 -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음.
 - 실제로는 압력 수위를 높여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전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검토하는 제재 강화 분야는 북한 도항과 송금임.
 - 현재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최고위급 간부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함.
 - 또 북한에 돈을 보낼 때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재 300만 엔(3천600만원)에서 더 끌어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대북 수출입은 이미 전면 금지한 상태여서 더 강화할 수 없는 상태임.
 - 아베 총리는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부터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난항을 겪자 일본이 앞장서서 강경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정권은 또 이달말에는 민주당 정권이 설치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책본부를 설치할 계획임.

■ 기타 (대외 일반)

- 北 국립민족예술단 공연, 1.5~6 베이징 인민대회당과 천진대국원 가극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1.7,중통)
- 北 정부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대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1.9,중통·노동신문/진보적 인민들의 자주위업과 평화수호 투쟁의 고무적 기치)
- 김정일생일(광명성절, 2.16) 경축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준비위, 1.9 결성(1.12,중통)
- 北 외무성 비망록(1.14),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으며 '유엔사령부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며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1.14, 중통)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노동신문 "공동선언 이행이 대결상태 해소 방도"(1/9, 노동신문)

- 북한은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6·15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남북간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함.
- 신문은 이날 '대결상태 해소는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5년간 북남선언들이 성실히 이행됐더라면 북남관계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결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오늘의 정세에서 북남사이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는 기본 방도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북남사이의 대결 상태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 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해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은 6·15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고 래왕(왕래)과 접촉, 연대연합을 강화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을 철저히 쫓아한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박근혜 대북공약 빈말인지 지켜볼 것"(1/9,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박근혜의 선거공약이 빈말인가 어떤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좀 두고보자'라는 글에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7·4공동성명에 조인한 사실과 2002년 박 당선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던 사실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으며, "대선 기간에 박근혜는 대북대결정책을 취한 이명박 도당과는 거리를 두며 화해와 평화정책을 취하겠다고 강조했고 북남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까지 말했다"고 밝힘.
 - 이어 "같은 입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니 '선비핵화 후경제 협력' 등 이명박이 하던 소리를 되풀이하는 말도 들려온다"며 "만일 박근혜가 교만해지고 공약을 빈말로 돌린다면 남조선 인민의 엄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위협하기도 함.

- **차당선인,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시동거나(1/1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에 시동을 걸지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공약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 왔으며, 그러면서도 북한 핵개발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해 왔음.
 -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장즈진(張志軍) 중국 정부 특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가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큰 구상 아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당선인이) 한편으로는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박 당선인 측의 입장도 분명히 했음.

나. 경제·사회·문화

- **이달말 남북축구 불투명..정부-대회참가측 신경전(1/13, 연합뉴스)**
 -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민간차원의 남북 축구대회 참가 여부를 놓고 대회 참가 측과 정부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가 이 대회에 참가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차기정부 출범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 인천시는 중국 하이난(海南) 성에서 오는 19~30일 남한과 북한, 중국, 태국 등 4개 팀이 참가하는 '제3회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린다고 지난 2일 밝힌 상태임.
- 강원도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국제 여자청소년 축구대회'가 오는 24~27일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 일원에서 열린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대회에는 남북한을 포함해 중국, 미국 등 4개국 선수들이 참가함.
- 두 대회 모두 중국 하이난성 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이 협회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형식으로 개최가 추진되고 있음.

■ 기타 (대남)

- 중앙통신사 논평(1.7),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문화일보 인터뷰 對北 발언 관련 '마지막까지 대결정책 연장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구차하기 짝이 없다'고 재차 비난(1.7, 중통/정치머슴꾼의 거물행세)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對北 발언(5.24조치의 영향력 등) 관련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다음기 정권이 그대로 받아들게 하려는 기도'라고 지속 비난하며 '무자비한 징벌' 위협 (1.10, 중통/산송장들의 단말마적 지랄발광)
- ○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라며 '온 거래의 6.15·10.4선언 이행투쟁 전개' 선동(1.11, 중통·노동신문/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 실현의 근본전제)
- ○ 새누리당 대변인의 '北 인권법 제정' 발언(1.3) 관련 '北 체제와 인민에 대한 노골적 도발, 대결연장을 꾀하는 음모의 산물'이라고 재차 비난(1.13, 중통·민주조선/새누리당의 북인권법 조작책동)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코언 前 美 국방 "2기 오바마정부, 北비핵화 계속 압박"(1/9, 연합뉴스)
 -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달 중순 출범할 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코언 전 장관은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예상한 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없다"고 밝힘..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그러지 않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제재를 받을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은 김정연에 달렸다"고 강조함. 그는 또 "북핵 6자회담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모든 참가국이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북한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6자회담 무용론을 일축함.
 -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재임 때보다 발전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억지하기 위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제재했다"고 설명함. 그는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은 군사적인 대응"이라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함. 그는 "도발시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확고해졌다"면서 "우리는 이런 국제사회의 협력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함.
 - 이밖에 그는 올해 진행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경제는 좋지만 미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이 전략적 목표를 기반으로 아태지역에서의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우회 제기했음.
 -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인 코언 전 장관은 영국계 로펌 DLA피어퍼 고문 자격으로 이 회사의 한국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방한했음..
- 차당선인 "北핵개발 용납못해..추가도발시 단호 대응"(1/10,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북한의 핵 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에서 중국 정부 특사인 장즈쥘(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조운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함. 박 당선인은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말함.

- 박 당선인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국의 새 정부가 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 안전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장 부부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문제에 대해 양국 간 조율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남북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표명한 경고에 중국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이후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장 부부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박 당선인의 조속한 중국 방문을 희망한다는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함. 이에 박 당선인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 지도부가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희망하면서 "두 나라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신뢰와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함.
- 장 부부장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 시일 내 박 당선인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박 당선인은 "지난번에도 중국 대사가 와서 특사를 보내달라고 했다. 중국에 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함. 박 당선인은 중국을 수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한 뒤 2005년과 2007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2005년 시 총서기가 방한했을 때에도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친밀감을 표시했음. 박 당선인은 중국어로 "신넨콰이러(新年快樂,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기도 함.
- 면담에는 박 당선인 측에서는 유일호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본부 과 위원, 조운선 대변인 등이, 중국 측에서는 장신선(張愐<金 3개>森) 주한대사와 상하이밍(邢海明) 외교부 참사관 등이 배석함. 장 부부장은 이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함.

나. 미·북 관계

- <구글 회장 訪北 "이기적 관광" vs "北 변화에 도움">(1/9, 연합뉴스)
 - 지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일행의 방북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9일 전함.
 - 우선 이번 방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음.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은 VOA와 인터뷰에



서 슈미트 회장의 방북이 "이기적인 관광(egocentric tourism)"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함. 리스 총장은 북한이 구글의 신흥시장이 될 수 없는 데다가 북한에 대한 기술 이전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슈미트 회장이 왜 귀중한 시간을 구글 주주들의 이익과 관계없는 방북에 할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함.

-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양연구소 부소장은 VOA에 "(슈미트 회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에서 어떤 기회를 모색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특히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함. 그는 "리처드슨은 자기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정치인으로, 이런 성향을 잘 아는 미국 정부는 그를 믿을만한 대북 창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과거 방북 때마다 공명심을 내세웠다고 지적함.
- 이성윤 티프츠대 교수는 "리처드슨이 2010년 12월 방북 때 자신의 북한 방문으로 전쟁이 억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스스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이 교수는 리처드슨 일행의 방북 목적이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의 석방에 국한된 것이라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유화 제스처를 쓰는 차원에서 리처드슨 일행에게 최소한 석방 약속이라도 해줄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음.
- 하지만 슈미트 회장 일행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음.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은 "미국 대표의 자격으로 북한 당국과 교섭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대북 접촉 역시 북한의 행보를 점치고 위험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특히 구글 회장의 방북은 경제와 생산 공정의 컴퓨터수치제어(CNC)회를 강조한 김정은의 정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함.
- 매사추세츠공대의 존 박 연구원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앞세워 온 슈미트 회장의 방북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사회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며 "구글이 경제개선뿐 아니라 폐쇄성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은 북한에 시의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음. 박 연구원은 "구글이 위성 영상지도 서비스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접근하는 시도는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임.

다. 중·북 관계

- "中, 안전성 검증 안 된 유전자조작 식량 북한에 원조"(1/7 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원조한 1천만톤의 식량은 자국에서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량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신(博訊)은 6일 중국 농업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덩샤오핑(鄧小平)의 딸 덩난(鄧楠)이 지난 2004년부터 중



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는 1천만톤의 식량 원조 일을 맡으면서 유전자 조작 식량을 보냈다고 보도함. 이 관리는 당난 가족이 국무원 고위 관리의 도움으로 북한에 유전자 조작 식량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 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고 폭로했다고 보신은 전함. 북한은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으로 부터 원조받은 식량이 유전자 조작 식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덧붙임.

- 중국은 작년 3월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힘 닿는 범위에서 계속 북한을 지원해 왔다"고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음.
- 중국에선 작년 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화한 이른바 '황금미' 실험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음. 중국 당국은 2008년 6월 후난성 헝난(衡南)현 장커우(江口)진 초등학교에서 '황금미' 실험이 실시됐다고 시인하면서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한편 관련자를 문책했음. 앞서 중국 당국은 작년 2월 자국에서 개발된 유전자 변형(GM) 작물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며 이의 상품화를 허용한 바 없다고 밝힘.

● "북한, 광산개발권 대가로 기반시설 건설 추진"(1/7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도로, 호텔 등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해주는 중국 기업에 광산개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7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북한 곳곳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대가로 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게 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지하자원 이외에 별다른 외화벌이 교역품이 없는 북한은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자 무연탄, 철광석, 금 등의 대중국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
- 그러나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자체 광산 개발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 측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음. 중국 후난웨이진(湖南緯金)투자그룹은 북한 내 호텔과 고속도로 건설 등을 지원하고 북한 최대 금광인 평안북도 운산금광 개발에 참여하기로 함. 이 그룹은 금광 개발권을 얻기 위해 올해 완공 예정인 북한 내 30층 규모의 5성급 호텔 건설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음.
- 지린성의 훈춘용이(珲春永益)수출입무역회사도 지난해 말 북한 평양모란봉무역총회사와 자강도 우산시의 금광을 합영 개발하는 협약을 맺음. 평양모란봉총회사는 주로 평양시의 기반시설 건설을 담당하고 금, 은, 철, 석탄 등의 수출입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중국 측 파트너인 훈춘용이수출입무역회사도 주력 업종이 철광, 탄광, 부동산 개발과 고급 호텔 운영임.
- 한 대북 소식통은 "기반시설 건설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은 투자 규모가 크고 광산을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 북한 측 광산권 소유기관과 추가 협상을 해야 하는 탓에 중국 측 입장에서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규모 기업들은 이미 북한 광산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고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있으므로 현재 협상은 계속하되 실질적인 투자는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전함.

- 중국의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합영투자위원회를 주축으로 활발한 외자유치 활동을 벌인 북한이 올해 국가 전략광산을 무기로 기반시설 투자·제공과 광산개발권을 교환하는 방식의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中, 北에 전문가 70명 파견 경제특구 '컨설팅'(1/9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전문 인력 70여 명을 보내 나진, 황금평·위화도 공동 경제특구에 대한 '합작 컨설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내 유력한 대북 소식통은 9일 "지린(吉林)성 정부 산하 상무청 직원 70여 명이 수개월째 북한에 파견돼 중·북 합작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이 소식통은 "크게는 경제특구의 운영 형태에서부터 특구 관련 각종 법 제도, 외국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30여 년 개혁개방의 중국 비법을 전수 중"이라고 덧붙임.
- 지린성 상무청은 중앙 부처인 상무부와 직계 상하 관계임. 북한에 파견된 중국 공무원들은 나진, 황금평·위화도 부근의 신의주, 평양 등지를 오가며 구체적인 경제특구 운용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양국은 지난해 8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나진, 황금평·위화도 관리위원회 출범에 합의했음. 양국은 지난해 하반기 중국 주요 도시를 돌며 대북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음. 이로 미뤄 북·중 양국이 두 곳의 경제특구를 관리위원회 주도형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외는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실제 북한의 경제 잡지 '경제연구' 최신호(2012년 4호·10월30일 발행)는 경제특구 관리형태가 보통 관리위원회 주도형, 공사운영형, 관리위원회 협조형, 합작형, 위탁 관리형으로 분류되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위원회 주도형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소개함. 현재 남북한이 운영 중인 개성공단도 관리위원회 중심임. 그러나 정부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커 투자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됨. 중국은 공동 경제특구 운영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개입을 줄이려고 관리위원회 주도형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가운데 중국의 리진자오(李金早)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은 북중 경제무역회담을 위해 지난 7일 평양을 방문했음. 리 부부장은 개발협력 담당 부부장이어서 북중 고위급 간에 공동 경제특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리 부부장은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집권 이후 양국 경제 협 논의를 위해 방북한 고위급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됨. 그러나 지난해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가 북한 당국의 계약 파기로 낭패를 본 중국 시양그룹(西洋集團) 사건 등 때문에 중국 내의 대북 투자 열기는 그다지 신통하지 않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경찰, 재일동포 '북한 공작원' 구속(1/10, 연합뉴스)

- 일본 경찰이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재일동포를 북한 공작원으로 보고 구속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함.
- 오사카부 경찰청 외사과는 이날 군사 관련 정보를 담은 시판용 보고서를 무단 복제해 북한군 관계자에게 보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효고(兵庫)현 아미가사키(尼崎)시에 사는 Y(42)씨를 구속했음. 일본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긴 했지만, Y씨가 북한군 관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은어를 사용한 점을 들어 북한 공작원으로 판단했다고 통신은 전함.
- Y씨는 2009년 9월말 미국 조사 회사의 시장 조사 보고서 2부(116만엔=1천400만원 상당)를 사들여 무단 복제한 뒤 북한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음.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의 무기나 군사통신 기술의 개발 동향이 담겨 있었음. 일본 경찰은 Y씨가 전자우편을 보낼 때 외무성을 '도쿄대', 방위성을 '교토대'라고 적는 등 지정된 은어를 사용했고,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자료나 문서를 사진 밑에 숨기는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함. 또 Y씨가 전자우편을 보내기 직전에 중국에 건너가 북한군 관계자로부터 보고서 구입비용과 보수를 받았고, 이 보고서 외에도 군사 관련 서적과 자료를 북한에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음. 이에 대해 Y씨는 "(보고서는) 연구 목적으로 샀고, 복제하거나 송신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
- 일본 경찰은 지난해 6월 석면을 제거하는 신규 사업을 한다고 꾸며 중소기업 지원 용자금 1천만 엔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Y씨를 구속했음. Y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번에 다시 구속됨. 산케이신문은 Y씨가 처음 구속됐을 때에도 사기는 명목상의 구속 혐의일 뿐이고, 일본 경찰이 Y씨를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의 공작원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함. 이후 보강 조사를 거쳐 Y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단정한 것으로 보임. 교도통신은 Y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북한군 관계자와 접촉해 군사 관련 정보를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임. Y씨는 조선적(籍, 일본 법률상 무국적)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7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음.

마. 기 타

● "유엔, 北 탄소배출권 시설물 승인 완료"〈美방송〉(1/11, 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에 신청한 탄소배출권 시설물 승인이 지난해 말 완료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북한의 탄소배출권 신청을 대신한 체코의 전력회사 토픽 에너고 사의 한 고위 인사는 RFA에 "북한이 신청한 2개 시설물의 타당성 확인 절차가 작년 말에 끝났다"며 이로써 북한이 신청한 시설물 6개의 승인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힘. 유엔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 배출량



을 줄인 나라나 기관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은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해야 함.

-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승인받은 시설물은 예성강 수력발전소 3·4·5호, 함흥 1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2호 발전소 등 수력발전소 6곳임. 북한은 현재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가 모두 완공되면 6개 수력발전소를 통해 연간 2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거나 탄소배출권을 사들여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동맹 60주년 맞아 '디펜스비전 2030' 마련>(1/7, 연합뉴스)

- 한미 군 당국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디펜스 비전 2030(이하 비전 2030)'을 마련키로 했음.
- 국방부는 2030년까지의 한미동맹 목표가 담기는 비전 2030을 양국 정부가 공동 연구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연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힘.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동맹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 한미동맹 디펜스 비전 2030은 추상적인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정책에 도움이 되는 비전의 형태로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함. 이 관계자는 "오늘날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발 위협과 (동북아) 영토갈등,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인해 복잡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급변하는 전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도 더욱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에서 한미동맹 60주년을 앞두고 국방 분야의 장기 비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장기 전략기획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한미동맹은 6·25전쟁 정전 뒤인 1953년 10월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공식 출범했음. 국방부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학술세미나(9월) ▲한미동맹 60년사 발간(10월) ▲다큐멘터리 제작·방영(10월) ▲한미동맹 음악회(9월 말) ▲한미동맹 공로인사 초청(10월)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차당선인 中특사 회견 "양국관계 놀랍게 발전"(1/11, 인민일보)**

-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에서 장즈쥘(張志軍) 중국 특사 겸 외교부 부부장을 회견하였음.
- 장즈쥘 특사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안부 인사와 함께 시진핑 총서기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한 말을 전달함. 시진핑 총서기는 박 당선인에게 한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다시 한번 축하하고, 박 당선인이 중한 양국의 이해와 우호 증진 그리고 양국의 협력을 위해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은 중한 관계는 물론 국제 및 지역 문제에 있어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매우 중요시 한다고 전함. 아울러 한국 측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중한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함.
- 박근혜 당선인은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에 대한 안부 인사를 전달하였음. 박 당선인은 중한 수교 20년 간 양국 관계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발전했고, 양국 간에는 역사와 문화적으로 두터운 유대관계와 폭넓은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 후에 한층 더 한중 양국 간 우호와 신뢰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 협력을 통해 인문 특히, 청소년 간 교류를 촉진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파트너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양측은 지역 정세 등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당일, 장즈쥘 특사는 또 서울에서 한국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인수위원회 대표를 회견하였음.

● **한국 對조선 정책...中"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지지"(1/11, 인민일보)**

- 1월 10일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가졌다고 외교부 관영사이트는 전함. 한국 새정부는 조선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화를 통해 남북 긴장 관계를 완화하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 기자의 질문이 이어짐.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한반도의 이웃인 중국은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길 줄곧 지지해 왔다. 또한 이는 한반도 국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자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이롭다" 고 답변함.

다. 한·일 관계

● **일본 정부, 독도 단독제소 당분간 유보(1/9,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함.
- 이 신문은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해 일본 정부가 단독제소 준비를 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 차기 정부와의 외교 관계 복원을 중시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제소와 관련, "준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함. 외무성은 단독제소 준비를 거의 완료했음. 아베 정권은 단독 제소를 당분간 미루고 외교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총리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사를 파견한 것과 관련, "한국의 차기 대통령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야스쿠니신사에 방화한 중국인의 일본 인도를 거부한 데 강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외무성 관계자는 "떠나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잉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일본 정부는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의 정부 주최도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유보하기로 함.

● 한일 도쿄서 전략대화..관계개선 모색(1/10,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10일 도쿄에서 전략대화를 열고 양국관계 개선 및 동북아 정세 안정 방안을 논의함. 이번 전략대화는 다음달 말 우리나라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자 일본에서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린 양국간 고위급 대화임.
- 안호영 외교부 제1차관과 가와이 치카오(河相周夫)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이를 위해 양국 차관은 외교당국간 긴밀히 소통키로 하는 한편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키로 함. 또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해 한·중·일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음.
-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키로 했음. 이밖에 유엔에서의 협력, 핵안보 문제, 원자력 안전 문제, 안보 협력, 기후변화 문제 대응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이 새 정부 아래서 한일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함. 한일 전략대화는 단순한 현안 협의의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범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됐다. 이번이 12번째 회의임.

● 일본, 한국 대륙붕 확대 신청에 이의 제기(1/12, 연합뉴스)

- 일본이 한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확대 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함.
- 일본 외무성은 이날 새벽 CLC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일 양국은 국제조약에 근거해 양국의 협의로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이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심사해선 안된다고 주장함.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이해관계국인 일본이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심사는 미뤄지게 됐음.

- 한국은 지난달 26일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함.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200해리 밖 대륙붕 면적은 3년 전 예비정보 제출 당시보다 2배 이상 넓어짐. 중국도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국이 일본의 이의를 제기를 예상하면서도 정식 정보를 제출한 것은 우리 주장을 선언해 두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해역의 대륙붕 경계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의 회담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라. 미·중 관계

● "中-대만 갈등, 올해 미·중관계 위협요인"(1/8, 연합뉴스)

-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올해 미·중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잠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미국 국가안보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음.
- 미국 공화당계 정책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 마이클 마자 연구원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새 지도부 취임 이후 공격적인 대만 정책에 나설 경우 대만해협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가 7일 보도함. 중국이 양안 통일을 겨냥한 정치 대화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임.
- 대만으로선 양안 통일과 관련해 국민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양안 갈등은 미국의 불가피한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설명함. 대만은 지금까지 '경제가 우선이고, 정치는 다음이다(先經後政)'라는 대중국 정책 기조를 유지했음.
- 지난 2008년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당선된 이후 친중국 정책을 보여왔지만 정치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음. 마자 연구원은 "양안 통일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시진핑 지도부 내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되고 이는 순항하는 양안 경제협력도 위기에 빠뜨릴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음.

마. 미·일 관계

● 일본, 미국에 자위대 강화 방침 설명(1/8, 연합뉴스)

-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에게 자위대 강화 방침을 설명함.
-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오전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에 부응해 자위대의 역할



과 역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이는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방식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수정을 염두에 둔 것임. 일본은 올해 국방비를 증액하는 한편 중장기 방위전략과 장비 확보 계획을 담은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방위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함.

- 양국은 동맹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추진하기로 함.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음.

바. 미·러 관계

● "푸틴 대통령님! 저를 미국으로 보내 주세요"(1/10, 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하면서 미국 행이 좌절된 러시아 지방의 한 장애인 고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긴 편지를 써 파문이 일고 있음.
- 10일 현지 라디오 방송 '에호 모스크비(모스크바의 메아리)' 등에 따르면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도시 첼랴빈스크의 한 고아원에 사는 14세의 막심 카르고폴체프는 편지에서 7살 때부터 교류해온 미국인 부모들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제발 입양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함. 막심은 선천적 질병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그를 입양하려는 미국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러시아를 다녀갔으며 막심도 미국으로 가 미래의 양부모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왔음.
- 미국인들은 지난해 막심을 입양하겠다는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수속을 밟아왔지만, 러시아가 지난해 말 미국인 입양 금지법을 채택하면서 앞길이 막막해졌음. 첼랴빈스크주(州) 인권특사 마르가리타 파블로바도 어린 소년과 그를 간절히 원하는 미국인 부모들을 떼어놓아선 안 된다며 막심을 지지하고 나섬. 그러나 지금으로선 막심의 호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음. 일부에서 장애인 어린이라도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법 개정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오히려 러시아 정부는 9일 미국과의 입양 협정을 완전히 파기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음.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1월 1일자로 미국 측에 입양 협정 효력의 일시 중지가 아닌 파기를 알리는 외교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협정은 완전히 파기된 것"이라고 강조함. 러시아와 미국이 2011년 7월 체결한 입양 협정은 지난해 11월 발효했었음.
- 러시아는 지난해 말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연관된 러시아 인사들에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對美) 인권법을 채택했음. 지난달 28일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이 법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새해 첫날 발효함.



- 러시아는 입양 금지 조치를 취한 이유로 최근 20년 사이 미국으로 입양된 러시아 아이 19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을 지적하며 러시아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 갈등에 죄 없는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국내외의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러시아 야권은 오는 13일 모스크바 시내에서 입양 금지법 채택을 규탄하는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임.

사. 중·일 관계

● '다오위다오 5개월간 순찰...中"日 사태 파악하길'(1/9, 인민일보)

- 1월 8일, 중국 해양감시 편대는 중국의 다오위다오(釣魚島) 해역에서 연속 5개월 간 정례 순찰을 실시하며 중국의 영유권과 해양권을 수호해 왔음. 당일, 국가해양국의 쑤수셴(孫書賢) 총공정사(總工程師) 겸 중국 해양감시총대 상무 부총대장은 다오위다오 해역 순찰에 관한 질문에 답함.
- 쑤수셴 부총대장은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영토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다오위다오와 부속 도서에 대한 '매입'을 선포하고 이른바 '국유화'를 실시했다. 이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를 표하고 엄정한 교섭을 일본 측에 제기하며 끈질긴 투쟁을 이어갔다. 양국의 이전 지도자들은 중일 수교 당시 다오위다오 문제를 '보류하여 차후 해결하자'는 합의에 도달했었다. 중국은 이 같은 합의를 기반으로 장기간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특히 행동에 있어 최대한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일본 측의 '도서 매입' 행위로 인해 양국 간 합의가 깨졌고 중국 영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중국인들의 분노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부득이하게 국가 주권과 영토완정(領土完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힘.
- 쑤 부총대장은 또 "중국의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일관되며 변함이 없다. 다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로 본 섬을 둘러싼 12해리 해역과 상공은 중국의 영해이자 영공이다. 중국 측의 비행기와 선박이 다오위다오 해역과 상공에서 순찰을 실시하는 것은 본 해역과 상공의 평화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라고 말함.
- 쑤 부총대장은 "중국은 일본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의도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다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한 모순들이 더욱 격화되어 이런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측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 중국과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속히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함.

● '日방위성 국방예산 확대' 관련 중국 입장 밝혀(1/11, 인민일보)

- 외교부 관영사이트는 2013년 1월 10일 정례브리핑을 가졌다고 전함. 본 브리핑에서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일본 방위성이 제기한 2013년 국방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 "과거 역사로 인해 일본의 군사 안보 관련 움직임은 아시아 이웃국가들의 관심사며, 중국은 일본이 역사를 거울삼아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전함.



-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국방회의에서 2013년 국방예산 확대를 제기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기자가 질문함.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과거 역사로 인해 일본의 군사 안보 관련 움직임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관심사며, 중국은 일본이 역사를 거울 삼아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함.
- 일본 정부는 다오위다오(釣魚島) 영공에 진입하는 중국 비행기에 예광탄으로 경고 사격을 허가한다고 하는데에 대한 중국에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홍 대변인은 "9일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다. 중국은 일본의 다오위다오 해역 및 영공에 대한 침해 행위를 줄곧 반대해 왔으며 일본 측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에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함.

아. 중·러 관계

● 시진핑 "중·러 관계발전이 외교 최우선"(1/9, 연합뉴스)

- 러시아의 중국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이 중국 외교의 최우선 방향이라는 점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함.
- 시진핑은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함. 그는 이어 "국제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적절한 시점에 양국 간에 전략안보대화가 열렸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서로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고 국제 및 지역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함.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간 경제·무역, 에너지, 투자, 금융,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해가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파트루세프 서기는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을 카운터파트로 하는 제8차 전략안보 대화를 위해 방중했음. 양국 전략안보대화는 8~9일 이틀간 열림. 이런 가운데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로서 첫 외국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계기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이양 받아 당·군권을 쥔 시진핑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까지 넘겨받은 뒤 외국 순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지난달 19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시진핑이 러시아 여당 대표단의 보리스 그리즐로프 '통합 러시아당' 최고위원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3월 러시아 방문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함.

● "시진핑, 첫 해외 방문국으로 러시아 검토"〈대만언론〉(1/13,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이 중국 최고 지도자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음.



- 대만 중국시보는 13일 소식통과 외신 등을 인용해 이 같이 전망하고 방문 시기는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에 이어 국가주석 자리까지 승계하는 오는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거쳐 당 총서기로 취임한 직후 모스크바 방문을 추진했음. 그러나 당시 중국 내 정치현안 등을 고려해 왕치산(王岐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대신 러시아를 찾았음. 신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재선 직후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한 만큼 시진핑이 올봄 국가주석 취임 이후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라고 평가함.
- 시진핑은 앞서 지난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이 중국 외교의 최우선 방향이라는 점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양국 간 경제·무역, 원자력, 투자, 금융, 항공·우주개발 분야 협력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음.
-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내세우는 가운데 최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행보가 한층 주목받고 있음.

자. 기. 타

● 美 캠프 동아태차관보 내주 한·일 방문(1/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프 동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 동북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
-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캠프 차관보는 다음주 초 일본과 한국을 각각 방문할 것"이라면서 "최근 선거를 치른 양국 정부와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캠프 차관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클린턴 사단'의 일원으로, 이달 말 공식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차관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출장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그는 이번 한·일 양국 방문기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총리를 직접 만나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대응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함.
- 이어 눌런드 대변인은 전날 업무에 복귀한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날 오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함. 그는 "클린턴 장관은 기시다 외무상에게 총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오는 18일 미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기시다 외무상은 이를 수락했다"면서 "두 장관은 또 양자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함. 클린턴 장관은 특히 최근 동북아 현안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당



부했으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노 담화'의 수정 문제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놀런드 대변인은 설명함. 그는 또 "클린턴 장관은 김 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최근 한국이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대해 축하했다"고 덧붙임.

- 이와 함께 놀런드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 "상임이사국들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이밖에 방북 중인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및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이 연락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